

이슈브리프 271호
(2021. 6.18)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박병광 외교전략연구소

제271호



국문초록

영국 콘월에서 개막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G7으로 상징되는 선진국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초대받아 한 자리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G7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는 단지 2년 만에 개최된 데 따른 논의주제의 확장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의 주요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7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등장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등장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신뢰를 전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 이슈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미국이 의도하는 반(反)중국 연합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중 대립양상과 한국의 고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큰 기대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제고하는 대전략과 방향성의 나침반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G7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핵심어 : G7 정상회담, 미중경쟁, 한반도비핵화, 남중국해, 대만문제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박병광 (외교전략연구실)

G7 정상회의 참가에 따른 한국의 위상

영국 콘월에서 개막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중심 협의체임에 비해 G7은 선진국들 간 협의체로서 국제경제와 국제정치 및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초대받아 한 자리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G7 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중심의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마디로 G7 정상회의 참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세계 10대 강국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그만큼 주요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포괄성

이번 G7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팬데믹 종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 세계 경제회복과 재활성화, 공정무역과 미래번영, 지구환경 보호와 탄소배출, 전 세계 파트너십의 강화, 민주·자유·평등·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공유 등의 G7 어젠다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G7 정상회담 폐막과 동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무려 70개 항에 이르는 장문으로서 보건안보, 경제회복 및 일자리문제, 자유·공정무역, 기후·환경문제, 성 평등, 주요 국제정치 이슈에 대한 책임과 행동의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특히 G7 지도자들은 주요 국제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전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미얀마 등 당면한 문제들을 총 망라하여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중국이슈’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G7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단지 2년 만에 개최된 데 따른 논의주제의 확장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이 앞으로도 세계의 주요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7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 관련 제재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것을 동시에 촉구하였다. 과거 G7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꾸준히 다루어졌지만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다시 북한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강조함과 더불어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7 회담에서도 북미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신뢰를 전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G7 정상회의에서 가시화된 중국 견제

그동안 G7 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이슈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G7 회담은 마치 중국 견제의 공동전선 구축을 약속한 듯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하여 대만 해협의 안정, 신장 위구르지역 인권문제, 홍콩의 자유 등 중국 관련 쟁점들을 모두 담아냈다.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반복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홍콩에서도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꺼리고 불편해하는 이슈들이 총 망라된 느낌이다. 이처럼 G7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명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다.

한편 G7 정상들은 미국 주도로 중국의 거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서 저개발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는 협력파트너십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맞서 G7 주도로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B3W 계획은 전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마셜플랜’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서 수십조 달러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민주주의 부국들(G7)의 의지는 인정되지만 과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을 G7 회의를 통해 집중 견제를 받게 되자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영국주재 중국대사관은 G7 정상회담에 대해 ”소수국가들이 세계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미국 등 소수국가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소집단과 강권정치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켰고 이는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G7의 최후’라는 제목의 그림이 등장하고, G7 회의를 동화 ‘백설공주’에 비유해 ‘중국과 일곱난장이’로 패러디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중국정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G7 정상회의가 ‘반중전선’을 명확히 하자 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G7 정상회의의 목적은 분명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대립적이고 불신이 격화되는 세계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평가와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 연합을 강화해 중국의 패권 추구 의지를 꺾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고 중국을 비판하면서 연합세력의 ‘행동’을 요구하였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G7 정상회담을 마치 중국이란 거대한 도전자를 응징하기 위한 어벤져스의 단합과 결의를 과시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표면적으로는 G7 정상들이 중국 견제에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국별로 중국 견제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입장이 존재했다는 사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G7 회의가 반중국(Anti-Chinese)으로 비춰지는 것을 반대했고, 독일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탈리아

역시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G7 정상회의가 큰 틀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공조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견해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외쳤지만 과연 G7 국가들이 일사불란하게 미국의 의도에 따랐는가는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편 한국은 초청국 자격이었지만 G7 정상회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내용과 행동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은 내년에도 G7 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합세력의 일원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사안별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자율성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부지불식간에 미국의 반(反)중국 동맹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경계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중국 견제를 형성하는 G7 각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향후 유럽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또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두국가의 위상으로 전환된 것도 국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큰 기대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With great expectation comes great responsibility).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자긍심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향후 부응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늘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제고하는 대전략과 방향성의 나침반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G7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